



KERI Insight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jcho@keri.org)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cb@keri.org)

□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 (시나리오 1)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될 경우, 과거와 같이 우리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장기화된다면 2012년도 경제성장은 1.0%p 하락하여 2.5%를 기록할 전망
 - 사회불안 심리확산에 따른 소비 및 투자위축,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 자본이탈과 여행객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안전자산 사재기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수입물가 상승과 생필품 사재기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전망
 -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 1.1%p 감소, 총고정투자 증가율 1.5%p 감소, 수출증가율 3.0%p 감소, 경상수지 흑자 40.8억달러 감소, 원/달러 환율

84.5원 증가, 소비자물가 증가율 0.5%p 증가

- (시나리오 3)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 경제로 이행 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소요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약 96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8.2%에 해당
 -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북한의 GDP는 약 14%~43% 증가할 전망
 -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된다면 우리가 지원할 기초생활보장과 투자 지원 비용은 개혁개방이 안된 경우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
 - 통일 이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할 기초생활보장 비용은 약 14조 7,703억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지원 금액은 20조 5,347억 원에 달함

- 북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조달할 경우 야기될 간접비용(증세에 의한 GDP 성장률 감소 등)은 약 60조 9,532억원에 달할 전망
- 직·간접비용을 포함한 남한의 총 경제적 비용은 96조 2,58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8.2%에 해당하는 규모
- (시나리오 4) 북한이 급속히 붕괴하고 통일될 경우 2020년까지 소요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국내총생산의 18.5%에 달하는 약 217조원으로 추정됨
 -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지역경제가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지만 남한이 부담할 비용은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단기적 비용은 시나리오 2와 같이 약 11조 4,000억원에 달할 전망
- 기초생활보장 지원비용은 31조 3,127억 원으로 시나리오 3에 비해 16조 5,424억원 더 소요될 전망
- 투자지원 비용은 30조 8,021억원으로 시나리오 3에 비해 10조 2,674억원 추가될 전망
- 재원조달로 야기될 간접비용은 155조 1,785억 원에 달해 시나리오 3에 비해 94조 2,253억원 상승할 전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진행 중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사망
 - 2011년 12월 19일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공식 발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시간, 장소, 원인 등과 관련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공식 발표만 확인된 상황
- 장례식까지는 뚜렷한 권력투쟁 조짐 없이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전망
 - 국가안전보위부 장악 이후 김정은은 당분간 노동당과 군부 장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노동당 간부와 군부 역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간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동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
 - 따라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단기간에 권력구조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김정은의 권력장악 과정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 능력검증이 안된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장악 과정에 대내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
 -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지 1년 3개월에 불과하여 노동당 및 군부를 모두 장악하지 못한 상태
 - 당분간 내부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 지지세력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직접 권력장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 못함.
 - 그 외 김정은 지지에 소극적인 군부 강경세력인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세력이나 김정남 지지세력으로 구분되는 일부 군부세력이 존재하여 김정은 권력장악 과정에는 여전히 대내적 불확실성 존재
- 한반도 헤게모니 장악 과정서 주변국의 영향력 증대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
 -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를 연결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

어하려는 모습

- 미국의 정치·경제적 아시아 진출을 막고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은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칠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에 연이어 발생한 유럽의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선진국은 누적된 재정적자로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여력이 약한 상황임.
- 신흥국가들도 국내물가 상승 등 국내 문제로 인해 성장보다는 안정화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도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복지 등 소비성 재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전망
- 복지국가 실현과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제기될 대중영합적인 공약은 우리의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킬 전망

-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발생한 김정일 사망 사건은 향후 진행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의 경험상 북한관련 리스크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고 지속성도 거의 낮았음.
- 하지만 권력승계가 순조롭지 못해,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대규모 자금유출, 주가환율 등 금융변수의 변동성 확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성장둔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 권력승계 과정 상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장·단기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2012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우리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본 연구는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경제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북한체제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 안정적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권력승계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 김정일 사망 이후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으며 급속한 체제붕괴로 단기간에 흡수·통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김정일 사후 진행될 북한체제의 변화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예측·분석하고 이에 맞게 재정운영의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야 함.

2. 김정일 사망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 현재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김정일 사망 이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됨.

- 시나리오 1: 김정은으로의 순조로운 권력승계

- 과거 김일성 사망(1994.7.8.) 및 최근 2차 북한 핵실험(2009.5.25.), 천안함포격(2010.3.26.), 연평도포격(2010.11.13.) 때와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 빠르게 안정

- 지정학적 리스크의 뚜렷한 증가가 없어 실물경제에 가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 심화 - 김정은 정권 유지
 - 권력투쟁이 장기화되고 군부의 역할이 증대되나 김정은 정권은 유지되며 현재와 같이 폐쇄적인 경제체제 유지
 - 전면전보다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체제결속을 위한 국지적 도발 감행 가능성이 고조되거나 소규모의 국지전 도발이 발생
- 시나리오 3: 개혁·개방 세력으로 정권교체 - 통일
 - 김정은 반대세력의 확대로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이 가중
 - 궁극적으로 김정은 반대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개혁·개방으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축소
 -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나, 5~10년 후에 남한 주도로 통일이 달성
- 시나리오 4: 북한체제 붕괴 및 흡수통일
 - 권력투쟁 과정에서 북한 내 무정부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되어 남한으로 흡수통일
 - 막대한 보건복지비용(최저생계비, 의료 및 교육 보장비 등)과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비용 소요
-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에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김정일은 1993년에 이어 1998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면서 안정적으로 집권 성공
- 현재 김정은을 대신할 확실한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본인의 후견인 장성택(당 행정부장, 고모부), 김경희(당 행정부장, 고모)의 도움을 받으며 집권할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은의 실질적 집권 이전까지 안정적인 과도기를 거치는 경우
 - 김정은이 명목상의 지도자에 머물고 장성택 및 김경희 등 후견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 권력 이양
 - 과도기 이후 김정은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고 당분간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으나 권력이동에 따른 불안정은 최소
- 과거 여러 사례처럼 김정일 사망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단기간에 그쳐 금융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 김일성 사망(1994.7.8.) 및 최근 북한 관련 사례에서 보듯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단기간에 소멸
 - 과거 김일성 사망(1994.7.8.) 및 최근 2차 북한 핵실험(2009.5.25.), 천안함포격(2010.3.26.), 연평도포격(2010.11.13.)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
 - 단기적 영향이 컸던 2차 북한핵실험의 경우 사건 발생 2일 동안 코스피가 3% 하락했으나 5일 만에 회복
 - 이번 김정일 사망 발표의 경우에도 당일 코스피가 약 3.4% 하락했으나 곧바로 회복하여 사건 발생 2일(2011.12.21.) 만에 이전 수준 회복
 - 또한 최근 북한 관련 리스크의 환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이번 김정일 사망 발표 역시 1% 내 환율 변동을 야기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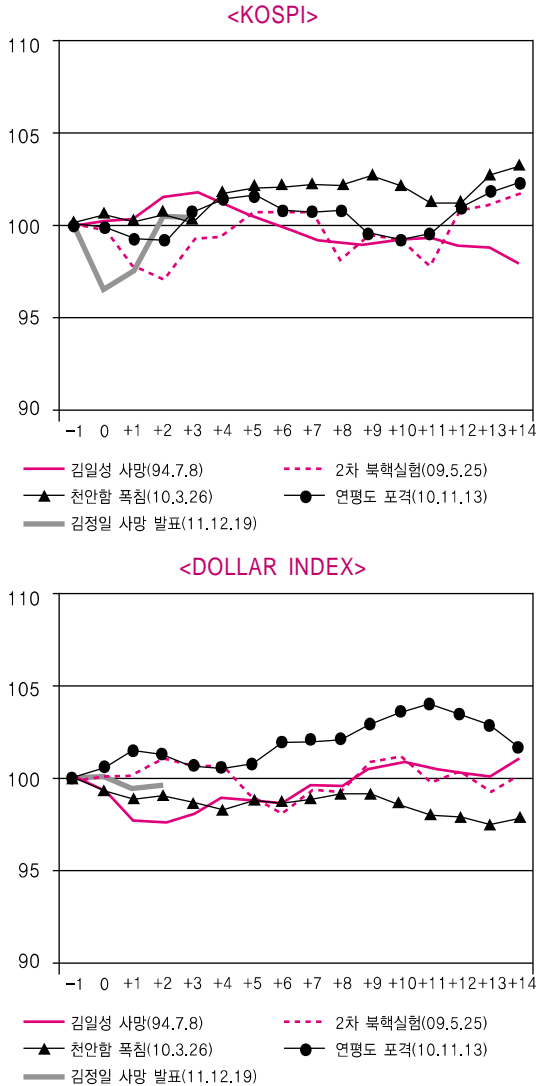
3. 예상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1) 시나리오 1: 김정은으로의 순조로운 권력승계

- 김정은으로의 순조로운 권력승계가 진행되거나 안정적 과도기를 거치면서 북한 내부에 동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

<그림 1> 북한관련 리스크와 주식시장 및 환율추이

(단위: 기준일=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2012년 국내 총생산은 기본 전망과 동일하게 3.5% 성장 예상

-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국내총생산은 3.5% 성장 예상
 - 사회불안심리의 확산을 통한 소비위축, 환율 및 금리 급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
 - 국가신용도 하락, 국제자본 유출, 국제수지 악화 및 투자 급감도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
 - 따라서 2012년 국내총생산은 기본전망과 같이 3.5% 성장할 전망

(2)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 심화 - 김정은 정권 유지

가. 예상되는 권력승계 경쟁 과정

- 김정은 정권은 유지되나 권력승계경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소규모 국지전 발발
 - 김정은 권력장악에 증대한 도전이 발생하여 계파 간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한반도 긴장 고조
 -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후계자로 발표된 지 1년 3개월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력장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장성택, 김경희 등 김정은 후견세력이 권력장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군부, 김옥(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 김정남(김정일의 장남) 등이 권력투쟁에 돌입하는 경우
 - 권력투쟁이 장기화되고 군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소규모 국지전 발생
 - 김정은 정권은 유지되나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며 권력투쟁이 장기화되고 현재와 같이 폐쇄적인 경제체제 유지
 - 전면전보다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체제결속을 위한 국지적 도발 감행 가능성이 고조되거나 소규모의 국지전이 발생
 - 지속적 긴장 유지로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증대

나. 경제적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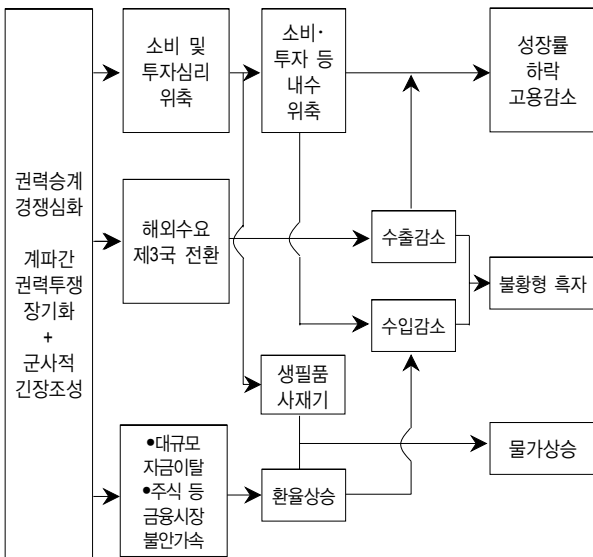
- 군사적 긴장 고조로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소비, 투자 위축
 - 북한의 권력승계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내적으로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 지속적인 긴장상태가 유지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생필품 사재기, 현금 및 금 수요 확대 등 소비불안이 확산

- 내구재 등 불요불급한 재화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여 일부 산업은 수요위축으로 고전
- 소비불안은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률 하락
-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해외수요의 제3국 전환이 발생하고 수출 위축
 - 한반도 내 지속적인 긴장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수요는 보다 안정적인 제3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됨
- 지속적 긴장상태로 국가신용 하락이 발생하고 자본조달비용 급등 및 자본유출 발생
 - 한반도 내 긴장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발생
 - 대규모 자금이탈, 주식 등 금융시장 불안 가속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국제수지 악화

다. 경제적 파급효과

- 분석방법
 - 분석모형: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 북한리스크 장기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모형 내에 반영하기 위한 파급경로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가정하고 관련 외생변수를 설정
 - 사회불안 확산,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위축
 - ⇒ 소비심리지수를 소비 및 투자 추정식에 포함하여 파악
 - 해외수요의 이탈에 따른 수출위축
 - ⇒ 해외수요 이탈을 전세계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
 - 외국인 자금이탈, 주가하락에 따른 원화가치 급락
 - ⇒ 외국인 자금유출 변동과 상관관계가 높은 종합주가지수를 대응변수로 활용

<그림 2> 시나리오 2의 경제적 영향 흐름도



자료: 국제금융센터

- 현실적으로 북한리스크의 크기를 엄밀히 분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거 남북한 긴장 고조가 장기화 되었던 1996~1997년의 사례 활용¹⁾
- 1996~1997년 중 소비심리지수, 종합주가지수 등의 추이를 통해 북한리스크의 크기를 파악하고 이를 2012년 북한리스크 변수로 가정
 - 소비심리: 1996년 2분기 117에서 1997년 2분기 101로 약 14%하락
 - 종합주가: 1996년 2분기 869에서 1997년 2분기 675로 약 22%하락

1) • 1996/4/4 :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DMZ 불인정 담화 발표
 • 1996/4/5 : 북한군, 판문점 공동구역내 무장병력 투입
 • 1996/4/6 : 김영삼 대통령, DMZ도발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 1996/4/9 : 유엔 안보리, 북한도발관련 긴급의제 채택
 • 1996/5/1 : 미국 국무부, 북한 테러활동지원국으로 발표
 • 1996/5/23 : 북한 고속경비정 5척 서해 침범
 • 1996/9/18 : 북한 잠수함 이용 무장간첩 26명 동해상 침투
 • 1996/10/21 : 김영삼 대통령, 무장공비침투 재발방지조치 대북촉구
 • 1996/11/19 : 북한 중앙통신,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선언
 • 1996/11/20 : 북한,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 잠정 폐쇄
 • 1997/2/12 :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망명
 • 1997/2/13 : 북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 거부

○ 통관수출: 1996년 2분기 329억달러에서 1997년 2분기 326억달러 약 1%하락

<표 1> 1996~97년 중 소비심리, 주가, 수출 추이

분기	소비심리		종합주가		통관수출 (4분기이동평균)	
	지수	t+0 대비 증가율	지수	t+0 대비 증가율	억달러	t+0 대비 증가율
1996.2Q(t+0분기)	117		866		329	
1996.3Q(t+1분기)	114	-2.6	910	5.1	322	-1.9
1996.4Q(t+2분기)	109	-6.8	807	-6.8	324	-1.3
1997.1Q(t+3분기)	103	-12.0	746	-13.9	320	-2.7
1997.2Q(t+4분기)	101	-13.7	675	-22.1	326	-0.9
2012년 반영 복한 리스크	전분기대비 3%감소		전분기대비 5%감소		세계GDP 전분기대비 약 0.5%감소*	

주: 수출의 전 세계 GDP에 대한 탄성치는 약 3.3%를 고리

□ 분석결과

-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되고 내부결속을 위한 국 지전이 발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다면 2012년도의 GDP는 기준성장률 3.5%에 비해 1.0%p 하락하여 2.5%를 기록할 전망
- 사회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각각 1.1%p와 1.5%p 하락하고, 해외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은 3.0%p 하락할 전망
- 수입이 수출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국내자본 이탈과 여행객 수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40.8억달러(28.4%) 줄어들 전망
- 불안고조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84.5원 증가하여 연평균 1,167원을 기록할 전망
-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생필품의 사재기 현상으로 소비자물가 증가율도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0.5%p 증가하여 3.9%를 기록할 전망

<표 2> 시나리오 2의 경제적 효과

(단위: 전년동기대비(%), %p,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천 명)

	시나리오1(기본전망) : A			시나리오2 : B			B-A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3.2	3.7	3.5	2.5	2.5	2.5	-1.0
민간소비	2.4	2.8	2.6	1.7	1.3	1.5	-1.1
정부소비	3.3	2.0	2.6	3.4	2.2	2.8	0.2
총고정투자	0.5	2.8	1.7	-0.7	0.9	0.1	-1.5
건설투자	1.5	2.2	1.9	1.2	1.7	1.4	-0.4
설비투자	1.6	6.3	4.0	-0.7	2.1	0.7	-3.3
총수출	7.9	8.4	8.1	5.4	4.8	5.1	-3.0
총수입	6.8	7.5	7.1	3.2	0.9	2.0	-5.1
소비자물가상승율	3.5	3.2	3.4	3.8	3.9	3.9	0.5
경상수지	52.5	91.3	143.8	38.0	65.1	103.0	-40.8
상품수지	104.7	123.7	228.4	110.1	132.1	242.7	14.3
수출(증가율)	10.7	9.7	10.2	8.2	5.2	6.6	-3.5
수입(증가율)	12.4	12.0	12.2	9.6	7.0	8.2	-4.0
서비스수지	-31.1	-24.1	-55.3	-51.5	-58.9	-110.4	-55.1
서비스수출	10.6	9.5	10.0	1.6	-4.1	-1.4	-11.4
서비스수입	9.4	9.6	9.5	5.3	2.2	3.6	-5.8
원달러	1105.0	1060.0	1082.5	1153.7	1180.3	1167.0	84.5
회사채	4.6	4.8	4.7	4.6	4.7	4.7	-0.015
실업률	4.1	3.3	3.7	4.2	3.5	3.9	0.2
취업자수	24272	24700	24486	24242	24636	24439	-47

(3) 시나리오 3: 개혁·개방 세력으로 정권 교체 후 통일

가. 기준전망

- 시나리오 3과 4는 시나리오 1과 2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시나리오 3과 4 모두 통일을 전제하고 있으나, 차이점은 개혁개방 이후 통일되는 것과 현 시점에서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이 되느냐에 있음
- 통일과 관련된 남한의 직접적인 비용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 주민으로 확대하는 것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 투자지원으로 한정함
- 통일에 따른 장기비용은 김정일 사망과 상관없

이 현재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기준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추계하기로 함

□ 기준 시나리오

- 현재와 같이 분단이 지속되고 북한이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심화될 전망
 - 북한경제는 2011~2015년까지 지난 4년간의 평균 증가율 0.5%씩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으며, 2016~2020년까지 1%씩 성장한다고 가정함²⁾
 - 남한경제는 2015년까지 3.5%씩 성장하고, 이후 3%의 성장을 가정함
 -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남북한 인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각각 3.8%와 2.8%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표 3> 기준시나리오 하의 남북한 경제 전망

	북한				남한			
	GDP (10억원)	일인당 GDP (만원)	인구 (천명)	성장률 (%)	GDP (10억원)	일인당 GDP (만원)	인구 (천명)	성장률 (%)
2007	26152	112.7	23200	-1.20	975013	2012.2	48456	5.1
2008	26963	115.7	23298	3.10	997438	2052.0	48607	2.3
2009	26720	111.0	24062	-0.90	1000431	2052.3	48747	0.3
2010	26586	109.9	24187	-0.50	1062457	2173.8	48875	6.2
2011	26733	110.0	24308	0.55	1102831	2215.5	49779	3.8
2012	26880	110.0	24427	0.55	1141430	2282.7	50004	3.5
2013	27028	110.1	24545	0.55	1181380	2352.4	50220	3.5
2014	27176	110.2	24662	0.55	1222728	2424.9	50424	3.5
2015	27326	110.3	24779	0.55	1265524	2500.2	50617	3.5
2016	27599	110.9	24897	1.00	1303489	2565.9	50801	3.0
2017	27875	111.4	25014	1.00	1342594	2633.7	50977	3.0
2018	28154	112.0	25132	1.00	1382872	2704.0	51141	3.0
2019	28435	112.6	25250	1.00	1424358	2776.9	51294	3.0
2020	28720	113.2	25368	1.00	1467089	2852.3	51435	3.0

□ 통일시점별 기초생활보장 지급액 산정

-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체제가 유지되고, 통일이

점이 늦어질수록 남북한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북한주민에 지원할 기초생활보장 지급액은 증가할 전망

- 북한 인구는 남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GDP는 더디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인당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액도 증가할 전망
- 통일시점이 2012년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지급액은 약 5조 9천억원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9조 6천억원에 달할 전망

<표 4> 통일연도 시점별 기초생활보장의 기준 지급액

	일인당 소득격차 (배)	수급자 비중 (%)	대상자 (천명)	4인가구수 (천)	가구당 지원액 (만원)	지급액 (10억원)
2011	20.1	62.4	15180	3795	144	5463
2012	20.7	64.3	15709	3927	149	5868
2013	21.4	66.2	16256	4064	155	6284
2014	22.0	68.2	16824	4206	160	6732
2015	22.7	70.3	17416	4354	166	7213
2016	23.1	71.8	17864	4466	171	7657
2017	23.6	73.3	18327	4582	177	8091
2018	24.1	74.8	18806	4702	182	8552
2019	24.7	76.4	19302	4825	187	9040
2020	25.2	78.1	19813	4953	193	9558

주: 추정방법

수급자 비중(3.1% x 일인당 소득격차)

현재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중 3.1%(약 155만명, 87만9천 가구)를 남북한 소득격차만큼 조정하여 북한의 수급자수 비중을 추정

북한 인구에 수급자 비중을 적용하여 수급대상자와 4인가구수를 추정

남북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은 동일하며 남한의 경제성장률과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가정

4인 가구 기준으로 남한의 기초생활 급여액 2011년 143만 9,413원에 달함

나. 시나리오 3의 경제적 비용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모형: 남북한 경제를 대상으로 한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활용

2) 지난 4년간 북한 경제는 연평균 0.5%를 기록하였으며, 현재의 폐쇄적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1%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힘들 전망.

- 입력데이터: 남한(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7년), 북한(사회회계행렬, 신동천 2009년)³⁾
- 개혁개방에 대한 정의와 가정
 - 본 연구에서 개혁개방은 수출입할당제의 단계적 폐지와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의 완전 자유화 그리고 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정의됨
 - Noland et al(1997)는 수출입을 할당하고 노동자의 직업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할 경우 북한 GDP는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정
 - Coe et al(1995)은 북한이 개방경제로 이행할 경우 북한의 TFP는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수입할당제는 매년 20%씩 5년에 걸쳐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개방에 따른 북한의 요소생산성(TFP) 향상은 Coe et al(1995)이 추정한 18%에 점진적으로 접근한다고 가정함⁴⁾
- 통일 이후에 대한 가정
 - 통일 이후에는 남북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북한 주민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북한 경제재건을 위해 현재의 북한 사회간접자본을 점진적으로 확대⁵⁾

□ 분석결과

- 개혁·개방으로 북한 경제는 통일(2017년) 이전까지 연평균 6%~8%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북한 경제의 빠른 성장은 수출입의 자유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요소생산성 향상에 기인함
- 통일 이후에는 남한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투자지원으로 성장률이 2017년에 37%에 달하다가

점차 하락하여 2020년에 14.5%에 달할 전망

- 개혁개방으로 북한 경제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통일 이후 남한이 지원할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은 크게 감소할 전망
 - 기초생활보장 지원액은 2017년에 4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어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약 3조 9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며, 2020년에는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약 5조 3천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표 5> 시나리오 3 하의 북한 GDP 변화

		GDP (10억원)	기준시나리오 대비 증가율 (%)	성장률 (%)
개혁 개방	2012	30541	13.6	7.9
	2013	32760	21.2	7.3
	2014	34970	28.7	6.7
	2015	37155	36.0	6.2
	2016	39464	43.0	6.2
통일	2017	54172	94.3	37.3
	2018	63605	125.9	17.4
	2019	72820	156.1	14.5
	2020	83405	190.4	14.5

-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2017년~2020년까지 4년 동안 총 96조 2,582억원,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8.2%에 달할 전망
 -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기초생활보장지원과 투자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과 세금인상으로 야기되는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
 - 투자지원은 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 및 통신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드는 비용으로 2017년에 약 2조 5,668억원에 달하며 2020년에는 7조 7,005억원에 달해 총 20조 5,347억이 소요될 전망
 -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북한 주민에게 지원할 지원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2020년까지 총 14조 7,703억원이

3) 신동천. "북한경제 사회회계행렬의 추정과 분석", 응용경제, 2009.

4) TFP가 매년 균등하게 3.6%씩 증가하여 2016년에 18%에 도달한다고 가정.

5) 투자지원은 북한의 현재 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 및 통신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2017년에 1.3배, 2018년에 1.5배, 2019년에 1.7배, 2020년에 1.9배로 확대하는 수준으로 가정

소요될 전망

- 북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2017년에 10조 4,722억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20조 3,045억에 달해 총 비용은 60조원을 상회할 전망
- 직·간접비용을 포함한 남한의 총 경제적 비용은 96조 2,58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8.2%에 해당하는 규모

<표 6> 시나리오 3 하의 통일에 따른 남한의 비용

	간접비용		직접비용		총비용 (10억원)
	세금인상에 따른 GDP 감소율 (%)	세금인상에 따른 GDP 감소액 (10억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액 (10억원)	투자지원액 ¹⁾ (10억원)	
2017	-0.78	10472.2	4163.4	2566.8	17202.5
2018	-0.98	13483.0	3785.4	4278.1	21546.4
2019	-1.17	16693.5	3530.2	5989.3	26212.9
2020	-1.38	20304.5	3291.3	7700.5	31296.4
합계	-	60953.2	14770.3	20534.7	96258.2

주: 1) 투자지원액은 북한의 현재 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 및 통신 부문에 대한 인프라를 2017년에 1.3배, 2018년에 1.5배, 2019년에 1.7배, 2020년에 1.9배로 확대하는 수준임

(4) 시나리오 4: 급속한 붕괴 후 통일

□ 분석방법

- 시나리오 4는 북한이 권력승계경쟁 과정에서 붕괴하여 2013년에 남한으로 흡수통일된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과 다르나 기준시나리오와 분석 방법은 시나리오 3과 동일
- 권력승계경쟁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2012년에 시나리오 2와 동일한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시나리오 3과 다름

□ 분석결과

- 통일이후 북한지역경제는 남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투자지원으로 2013년 북

한지역 경제는 42.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다가 점차 하락하여 2020년에 7.2%에 달할 전망

- 북한지역의 빠른 성장으로 남북한 지역의 소득 격차는 2013년에 15배에서 2020년에는 9.7배로 감소할 전망
- 소득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북한주민에 지원할 기초생활보장지원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 3조 6,670억원에 그칠 전망

<표 7> 시나리오 4 하의 북한지역 경제 변화와

기초생활보장 지급액

	GDP (10억원)	기준대비 증가율 (%)	성장률 (%)	소득격차 (배)	수급자 비중 (%)	기초생활보장 지급액 (10억원)
2013	38233	41.5	42.2	15.0	46.4	4401
2014	43740	61.0	14.4	13.5	41.9	4139
2015	48615	77.9	11.1	12.6	39.0	4007
2016	53636	94.3	10.3	11.8	36.4	3890
2017	58627	110.3	9.3	11.1	34.3	3793
2018	63605	125.9	8.5	10.5	32.6	3728
2019	68577	141.2	7.8	10.1	31.2	3687
2020	73548	156.1	7.2	9.7	30.0	3667

□ 남한의 총 경제적 비용은 약 217조원으로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18.5%에 달하며 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약 535만 원 수준

-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이 붕괴한다면 2012년도에 발생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시나리오 2와 동일함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사회적 불안심리로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어 GDP가 1.0%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북한지역 경제조건을 위한 투자지원 금액은 2020년까지 총 31조 3,127억원으로 추정됨
- 이는 현재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 및 통신 부문에 대한 인프라)

을 2013년에 1.1배에서 2020년에 1.8배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한 결과임

- 남북한 격차가 축소되면서 기초생활지원 금액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지만 시나리오 3에 비해 16조 5,424억원 더 소요될 전망
 - 시나리오 4의 기초생활지원 금액은 2013년에 4조 4,013억원으로 전망되며 2020년에는 3조 6,670억원으로 전망되어 총 지원금액은 31조 3,127억으로 추정됨
- 기초생활보장지원과 투자지원액을 세금을 통해 조달할 경우 발생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2013년에 10조 9,750억원, 2020년에 25조 7,327억원에 달해 간접적인 총 경제적 손실은 155조 1,785억원에 달할 전망
- 시나리오 4의 직간접적인 총 경제적 비용은 217조 2,933억원으로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18.5%에 이르는 규모이며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약 535만 원에 달함

<표 8> 시나리오 4 하의 통일에 따른 남한의 비용

	간접비용		직접비용		총비용 (10억원)
	세금인상에 따른 GDP 감소율 (%)	세금인상에 따른 GDP 감소액 (10억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액 (10억원)	투자지원액 ¹⁾ (10억원)	
2012	-1.00	11414.3	0.0	0.0	11414.3
2013	-0.93	10975.0	4401.3	855.6	16231.9
2014	-1.04	12765.3	4139.0	1711.2	18615.5
2015	-1.16	14692.7	4007.0	2566.8	21266.5
2016	-1.28	16658.6	3889.7	3422.5	23970.8
2017	-1.40	18729.2	3793.4	4278.1	26800.7
2018	-1.51	20936.7	3728.0	5133.7	29798.4
2019	-1.63	23274.0	3687.3	5989.3	32950.6
2020	-1.75	25732.7	3667.0	6844.9	36244.6
합계		155178.5	31312.7	30802.1	217293.3

주: 1) 투자지원액은 북한의 현재 에너지, 전력, 건설, 수송 및 통신 부문에 대한 인프라를 2013년에 1.1배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8배로 확대하는 수준임

4. 시사점

□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 시나리오 1과 같이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될 경우, 과거와 같이 우리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 권력승계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2012년도 경제성장은 1.0%p 하락할 전망
 - 사회불안 심리확산에 따른 소비 및 투자위축,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 자본이탈과 여행객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안전자산 사재기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수입물가 상승과 생필품 사재기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전망
 -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 1.1%p 감소, 총고정투자 증가율 1.5%p 감소, 수출증가율 3.0%p 감소, 경상수지 흑자 40.8억달러 감소, 원달러환율 84.5원 증가, 소비자물가 증가율 0.5%p 증가
-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 경제로 이행 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소요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약 96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8.2%에 해당
 -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북한의 GDP는 약 14%~43% 증가할 전망
 -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된다면 우리가 지원할 기초생활보장과 투자지원 비용은 개혁개방이 안된 경우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
 - 통일 이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할 기초생활보장 비용은 약 14조 7,703억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지원 금액은 20조 5,347억 원에 달함
 - 북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조달할 경우 야기될 간접비용은 약 60조 9,532억 원에 달할 전망

- 직·간접비용을 포함한 남한의 총 경제적 비용은 96조 2,58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8.2%에 해당하는 규모
- 북한이 급속히 붕괴하고 통일될 경우 2020년까지 소요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국내총생산의 18.5%에 달하는 약 217조원으로 추정됨
-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지역경제가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지만 남한이 부담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단기적 비용은 시나리오 2와 같이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
- 기초생활보장 지원비용은 31조 3,127억 원으로 시나리오 3에 비해 16조 5,424억 원 더 소요될 전망
- 투자지원 비용은 30조 8,021억 원으로 시나리오 3에 비해 10조 2,674억 원 추가될 전망
- 재원조달로 야기될 간접비용은 155조 1,785억 원에 달해 시나리오 3에 비해 94조 2,253억 원 상승할 전망

□ 시사점

- 권력이 순조롭게 이행되는 경우라도 초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환율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시나리오 2와 같이 단기적인 영향이 심화될 경우,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은 가능한 자제하고 심리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함
 -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인 현상이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약하지 않음을 국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요구됨
 - (재정정책)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보다는 재정의 철저한 집행을 점검하고 재정지출구조를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편성
 - (조세정책)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여 투자와 소비위축에 대비

- (통화정책)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금융정책보다는 시중의 유동성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미시적인 금융정책 추진
- (외환·환율정책)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미세조정 차원의 개입을 도모
-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초기에 통일되는 것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이행한 후에 통일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와 같이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투자지원 비용이 크고 이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간접적인 비용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경제가 개혁개방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북한의 붕괴와 통일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법,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방지해야 함
 - 북한이 급속히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을 둘러싼 남한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조달 방법과 통일비용 분담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형성해야 함
 - 통일 시 북한 지원 규모, 정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 사회적 여론 분열 및 갈등고조를 방지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격차를 급속도로 줄이는 선심성 정책은 재정적 부담이 상당함을 인식하고 북한 지원 정도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
 - 또한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6자회담 관련국들이 통일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2년 1월 27일 | 발행인 정병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01 | 팩스 785-0270~3

